

메이지유신에 ‘동아시아 근대(성)’를 묻는다 : 메이지유신 150주년 특집에 부쳐

박 훈(서울대 동양사학과)

역사연구와 역사서술에서 서구중심주의, 혹은 근대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은 이미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특히 전근대, 그중에서도 근세 시기¹를 근대의 기준에 수렴되는 시기, 근대로의 이행기 등으로 미리 설정하고, 거기서 근대적 요소²를 발견하려는 목적론적인 연구 태도는 많은 비판에 직면했으며, 많이 시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도 이와 관련하여 논고를 발표해왔다.³

그러나 서양의 진출 이후 시작된 이른바 ‘동아시아의 근대’를 연구할 때는 이런 문제의식이 곧잘 무너지곤 한다. 거기에는 어차피 근대 이후 동아시아 역사는 서양 근대로 점점 수렴되는 과정이라는 수렴주의적 태도가 깔려 있다. 서양 모델과 다른 현상은 뒤쳐진 것, 왜곡된 것, 봉건적 잔재로 규정되어 진지한 고찰의 대상 바깥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결국 동아시아 근대사의 전개과정을 근대주의적 가치, 이론, 개념으로만 파악하려 하고 근

1 동아시아사를 포괄하는, 널리 공유된 시대 구분은 아직 합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일본학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시대구분법에 따라 ‘근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물론 이것도 일본학계 전체가 합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근세’는 대체로 중국은 송대 이후, 조선은 조선 초 이후, 일본은 전국시대 이후로 볼 수 있다.

2 ‘근대’ 개념이 논자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는 잘 알려져 있다. 근대에 대한 필자의 생각에 대해서는 「네이버 열린연단」(근대문명에 대한 동서 문화비교적 고찰: 일본의 근대) 제출원고 참조(<https://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140488&rid=2938>).

3 주요한 것으로는 박훈,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사, 2014; 「‘봉건사회’-‘군현사회’와 동아시아의 ‘근대’시론」, 『동북아역사논총』 57, 2017.

근대화 성패의 서열을 매기려는 것이 대개의 연구 태도였다. 그러나 이런 연구 태도는 이미 알고 있는 근대화 과정을 재확인하고, 서양과는 다른(열등한) 한국적, 일본적, 동아시아적 특성을 지적하는 데 그쳐, 더 이상의 지적인 탐구를 방해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사에서 근대로 수렴되는 과정이라고 괄호 쳐버릴 수 없는 여러 현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근세에 대한 근대주의적 해석을 지양하는 흐름이 동아시아 근대의 근대주의적 해석에 대한 반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근대를 하나의 이상형으로 설정하고, 모든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은 여전히 강고하다. 그 입장들이 현실 근대에 흔쾌히 찬동하는 것은 아니며, 이상형으로서의 근대를 전제해놓고 현실의 근대사회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은 이런 입장이 다수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인류가 근대의 이상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든가, 아니면 나아가야 한다든가, 혹은 반대로 근대를 벗어나 제3의 길로 가야 한다든가 하는 걸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본 특집이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일뿐더러, 강렬한 정치적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 특집이 목표로 하는 것은 지난 150년간 전개되어 온 동아시아 근대를 관찰할 때, 이 같은 근대주의적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에서 벗어났거나 알았더라도 터무니없이 경시했던 여러 사상(事象)을 더듬어 찾아내려 하는 것이다. 그 사상(事象)들은 동아시아 근대의 바깥으로 밀려나 그것과 무관계·물고섬 했거나, 관계를 맺었더라도 잔재적 형태로 연명, 혹은 근대를 방해했다고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사실은 동아시아 근대에 깊숙이 연결되어 보조적·잔재적·특성적 존재에 머문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주연적 존재로 그 자신 동아시아 근대의 ‘근대적’·현재적 존재로 작용해왔던 것은 아닐까.

본 특집은 이런 문제의식에 서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근대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려 한다. 이런 시도는 적어도 지난 150년간의 동아시아 근대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근대주의적 접근으로는 격화소양(隔靴搔癢)의 느낌

을 지을 수 없었던 방법적 문제를 시정하면서, 좀 더 나은 지적 만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 특집에는 이런 관점에 서서 논문들을 모아봤다.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여기에 실린 글들을 이론적으로 위치 지을 만한 능력이 없어 각 논문들의 논지와 편집책임자로서의 감상을 적는 데 그치고자 한다.

먼저 다니모토 마사유키(谷本雅之, 경칭생략, 이하 같음) 논문은 소농경영과 근대경제의 만남에 대한 것이다(「메이지일본 경제발전의 '복층성'(複層性): '근대' 대(對) '재래'의 이원론을 넘어서」). 근세 이후 동아시아 경제의 핵심이 소농경영에 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그간의 연구는 봉건적 잔재, 자본주의화의 장애물, 반 근대적인 이중 구조의 주범으로 위치 지워왔다. 근세 소농경영 형성의 역사적 획기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논자들도 이것이 노동규율, 근면성, 경영마인드 등에서 근대 경제로의 전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막연히 평가할 뿐 그 구체적인 관련 양상과 존재 양상에 대한 연구는 드문 형편이다.

다니모토는 도쿠가와 시대 후반 이래의 재래적 경제발전과 근대적 경제발전의 이질성을 인정하면서도, 후자의 토대에는 전자가 있었으며 단순한 잔재나 토대가 아니라 독자의 경쟁력과 규정력(근대경제에 대한)을 발휘하면서 20세기 후반까지 근대 경제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을 세세하고 설득력 넘치게 검토하고 있다. 먼저 노동공급 면에서 비농업 부문에 대한 노동력 공급은 남녀를 불문하고 소농경영의 노동배분전략에 종속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근대적 공업이나 경제발전은 소농경영을 재편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소농경영은 근대 경제의 대립물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고 변형시키며 방향과 발전 정도를 규정하는 근대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다. 서양 근대에서 산출된 용어, 개념, 모델, 이론으로 이해되지 않는 근대일본의 경제적 '특성'의 실체는 이것이었다.

다니모토는 또 근세 후기의 지역사회가 달성한 사회편성의 원리가 새로운 경제발전에 어떻게 대응하여 공존·변용·재형성되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으나 지면 제약상 더 이상의 소개는 생략한다.

이 논문은 ‘전통과 근대의 결합’ 운운의 상투구만 난무하는 학계 현황에서 그 결합과 상호규정, 그리고 그 결과 진행되는 일본경제 ‘근대화’의 모습을 선명하게 밝혀낸 글로, 이 같은 문제를 궁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글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사상사 분야로 넘어가 보자. 메이지유신 과정에서 유학의 역할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활발한 편이다. 필자는 주로 막말기(幕末期) 유학의 역할을 정치사적으로 재평가하는 작업을 해왔는데,⁴ 최근 일본 학계에서는 사상사 분야에서 메이지 초기 유학, 특히 주자학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하다.⁵ 한국에서는 이새봄이 대표 논자 중 한 명인데 이번 글은 주자학이 아닌 포스트 소라이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포스트-소라이학(徂徠學)의 맥락으로 읽는 도쿠가와 후기 사상사의 논점: 메이지 유학자들의 사상적 토대」). 그녀는 19세기에 벌어진 소라이학에 대한 반대, 변용과정, 즉 포스트 소라이학이 갈아놓은 논점들이 메이지 유학자들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도쿠가와와 메이지시대 유학이 연속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메이지 초기 사상계의 과제나 현상이 소라이학 퇴조 후에 전개된 포스트 소라이학이 설정해 놓은 문제 틀에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소라이학의 유행으로 형성된 시문학, 사론 등의 시장이 메이지기의 그것들을 촉진시킨 점, 소라이학이 제공한 국제(國制)의 비교적 관점이 메이지기 정체론 논의의 길을 닦은 점, 메이지기 주자학자들의 사상전개가 포스트 소라이학이 제시한 논점들과의 긴장관계를 기반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이다. 지금까지 도쿠가와와 메이지 유학의 연속성을 강조

4 朴薰, 「武士의 정치화と「学党」—十九世紀前半の日本における「士大夫의 정치文化」의 台頭」, 塩出浩之編, 『公論と交際の東アジア近代』, 東京大学出版会, 2016; 「東アジア政治史における幕末維新政治史と「士大夫的 정치文化」의 挑戰: サムライ의 「土化」」, 清水光明編, 『「近世化」論と日本: 「東アジア」의 捉え方をめぐって』, 勉誠出版, 2015; 「幕末政治変革と「儒教的 정치文化」」, 『明治維新史研究8』, 2012; 「十九世紀前半における「議論政治」의 形成とその意味」, 『講座明治維新1』, 2010.

5 河野有理, 『明六雜誌의 政治思想: 阪谷素と「道理」의 挑戰』, 東京大学出版会, 2011; 刈部直, 『「維新革命」への道「文明」を求めた十九世紀日本』, 新潮社, 2017 등.

하는 연구들이 주로 주자학의 연속성을 강조한데 비해 이 논문은 주자학 뿐 아니라 포스트 소라이학을 폭넓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자학을 강조하는 필자도 계발된 바가 많다. 소라이학의 중요성을 식감하고 주자학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려는 최근의 연구경향에 대한 경종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배관문의 논문은 메이지유신과 국학 문제를 다루고 있다(『국학의 메이지 유신: 복고의 착종으로부터 신도를 창출하기까지』). 국학은 메이지 초기에 반짝 빛을 보고 신기관의 폐지와 더불어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정반대로 1930년대 국체의 본의(國體の本義)가 모토오리 노리나가를 소환하고 있듯이, 내셔널리즘의 광풍을 야기한 것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국학자들은 복고의 시점을 진무 천황기로 잡음으로써 무한한 개혁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은 상고를 소환하여 기성체제인 중세, 근세를 전면부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창출하려는 측면을 갖고 있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말하는 근대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근대도 서양도 국학자들의 개혁에 있어 선행적 배제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한편으로 서양을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 서양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동트기 전』 한조(半藏)의 결의처럼 국학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서양문명을 ‘그때 그때의 신도(神道)’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근대를 마냥 배척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내용과 질을 묻고 있었다. 즉 고대나 중세로 회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근대와의 격투였다는 것이다.

이 글의 지적대로 메이지시대의 국학은 내셔널리즘에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퇴행적인 복고주의로 향하는 길에만 영향을 주었던 것도 아니라는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근대 국학자들의 사상 전개에 내재적 맥락을 따라 읽어 나간다면 민족주의(국수주의)나 복고주의의 프레임만으로는 다 잡아낼 수 없는, 우리가 근대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려고 할 때 모종의 영감을 줄 수 있는 사상사의 수맥(水脈)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김태진의 논문은 가이에다 노부요시(海江田信義)의 인체도와 신체정치론의 검토를 통해, 일본의 근대사상 수용이 단순한 ‘오역’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국가라는 신체에서 전통과 근대는 어떻게 만나는가: 가이에다 노부요시의 인체 그림을 중심으로」). 김태진이 머리말에서 “기존의 논의들은 서양사상이 넘어올 때 뭔가 일이 벌어졌는데 이를 사후적으로 몇몇 장면들만을 뽑아내어 근대성 프레임의 틀로 재단하려 한다. 하지만 스냅사진을 몇 장 찍는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구성해 내는 것이 아니라,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를 살펴야 한다고 한 것은 본 특집의 기획의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에 따르면 가이에다는 로렌츠 폰 슈타인의 국가유기체론을 배우면서도 동양의 신체관을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오역’했다. 슈타인은 행정-입법-군주의 세 바퀴가 균형을 이루는 신체를 생각했으나, 가이에다는 인체의 머리에 신기관을 비정하며 두뇌의 통합성을 강조했고, 또 양생론에 기초하여 국가가 병에 걸리는 원인은 내부에 있으므로, 병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에 서서 가이에다는 ‘이상한 형태’의 신체 그림을 낳았던 것이다. 서양 근대를 원본으로 놓고 복사본의 원본은 무엇인가를 찾는 관점에서, 일본(동아시아)의 서양사상 수용사를 원본에 대한 복사본의 결여 혹은 원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서만 평가하는 자세를 교정한 논문이라 할 것이다.

그는 신체정치론을 통해 이를 구명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서양사상의 수용사(이렇게 보면 수용사라는 표현에도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에도 이런 자세는 광범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서양사상의 수용사는 아마도 마루야마 마사오가 추구했던 세계(이상형으로서의 서양근대사상을 일본은 끊임없이 지향)보다는, 그의 제자 와타나베 히로시가 묘사한 도쿠가와 유학수용사의 세계(중국과는 다른 사회체제에 서 있는 도쿠가와 유학자들이 인, 의, 방벌, 예 등등 유학의 기본 개념을 환골탈태시켜 변용, 정착시킨 것)에 더 가까울지 모른다.

오윤정 역시 근대미술의 ‘오역’을 다루고 있다(「메이지미술과 일본의 ‘근대’: 메이지미술회를 중심으로」). ‘오역’에서 출발한 일본의 ‘미술’은 제작상에서도 표

현사상에서도 갖가지 ‘오역’으로 가득 차 있다. 공부(工部)미술학교는 ‘미술’을 ‘기술’로 교육한, ‘서양에는 없는 서양미술학교’였다. 이 ‘미술’학교에서 기술자의 정체성을 가진, ‘서양에는 없는 서양미술가’가 성장했고 이후 이들이 메이지미술회를 조직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서양화가들은 내적 필요에 따라 서양미술을 주체적으로 오판하고 자율적으로 전용했다. 메이지미술회는 설립취지서에서 메이지시대의 사회와 사상이 과거의 것과 얼마나 다른가를 강조하며 새 시대를 맞아 정치, 병제, 공업, 문학 등 백반의 사업이 모두 경쟁적으로 구미제국을 따르니 미술만 세상을 등지고 구법을 고수할 수 없는 바, 자신들은 금일의 사회와 사상에 적합한 미술을 진흥하여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서양미술의 기법과 재료를 도입하여 기술로서의 미술, 기술자로서의 미술가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대단한(주체적인?) ‘오역’이었다. 그런 미술과 미술가는 서양에는 없었다. 그러니 그것은 서양적인 것도 근대적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근대’로 이것은 마치 다니모토가 관찰한, 소농경영에 의해 ‘오역’된 일본의 근대경제처럼 그 자체가 일본의 ‘근대 미술’이다.

마지막으로 서영채는 근대 초기 일본, 중국, 조선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격투를 해왔는지를 각국의 대표적인 작가를 다루며 논했다(『강박과 히스테리 사이, 메이지 유신과 동아시아의 근대성: 시마자키 도손, 루원, 염상섭을 중심으로』). ‘근대성의 공습’에 직면한 이들은 공통으로 ‘정신병’에 걸리지만 그 증상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으로 차이가 있다. 이 글의 재미는 이런 각국의 차이를 예민하게 지적한 점에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양 근대를 원본보다 더 원본처럼 카피하려 했던 복사본으로서 강박증에 시달리거나, 이 과정에서 좌절하여 히스테리 발작(예를 들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같다. 일본의 메이지유신은 그 선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유달리 요동의 진폭이 컸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읽으면서 위의 김태진이 원본과 복사본이라는 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비교적 편안한 어조로 일본 근대를 말하고 있는데 비해 서영

체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느꼈다. 아마도 ‘근대성’의 지위를 어떻게 정위(定位)하느냐에 서영채와 김태진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영채는 한국인 연구자로서 메이지유신 150주년을 맞는 입장을 ‘두 번의 꼬임’으로 포착했다. 하나는 서양 근대가 과연 올바른 방향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대동아공영권’ 같은 일본식 탈근대에 대한 비판이다. 그 덕분에 근대성의 논리 자체가 지닌 폭력성과 배타성을 강렬하게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에 대한 이런 비판적 입각점을 다지고 있기는 해도, 서영채의 논문은 본 특집에 실린 글 중 근대성의 특권적 지위에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근대성을 “이상적 지향점으로서 언제나 미완일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영원한 프로젝트로 보는 듯하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역사적 생성, 변화, 소멸을 거치는 역사적 존재라기보다 인류가,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전범으로 삼고 추구해야 할 이상이다. 동아시아의 근대가 보여 온 근대성에 대한 대안적 가능성이나 복수의 근대성에 대한 함축들은 “근대성의 자기 전개를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대안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근대성(이상적 지향점으로서 언제나 미완일 수밖에 없는)이 드러내는, 다양한 시차를 가진 전개라 함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다”는 서술은 근대성을,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는 개념이면서도 동시에 단일한, 영원한, 초역사적인 것으로 보는 그의 시각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서양 근대성과의 격투 과정을 앞에 놓고서 이를 히스테리와 강박으로 포착한 서영채와, ‘의도적 오역’으로 해석한 김태진, 오윤정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어쩌면 이 지점이야말로 이번 특집의 기획이 얼마나 큰 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상이 본 특집에 게재된 6편의 논문을 읽은 필자의 독후감이다. 필자가 편집책임자로서 전체 기획취지에 비취 ‘목적론적’으로 강조점을 둔 나머지, 각 집필자들의 본래 생각과 어긋남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다. 큰 오독이 없었길 바라지만, 있더라도 현명한 독자들이 각 논문들의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잡으시리라 기대한다. 그럴 경우 이 「편집자의 말」은 독후감을 빙자한 필자의 메이지유신에 대한 단상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